

轉換期的 財政·金融政策 調和

李 鍾 燾

〈中央大學校教授·經博〉

1. 轉換期的 韓國經濟

12月10日 民正黨은 第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修正案確定을 위한 黨政調整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즉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21%에서 12%로, 통화증가율을 당초 17%에서 9%로 대폭 축소조정한 정부의 長期通貨政策에 대해 급격한 축소조정은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며 경제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 目標에 얽매이지 않도록 융통성을 촉구한다. 특히 大企業偏重與信을 과감히 시정하라고…….

금년들어 두차례에 걸친 대형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위기」가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또한편에서는 金融產業發展을 위한 금융자율화와 金融政策의 과감한 쇄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변화와 대응정책제시는 비단 금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國民經濟의 전반적인 對內外與件變化에서 야기되는 전환기의 경제정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轉換期的性格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추자면 해방후 처음으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두가지 중요한 對內外課題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점을 짚을 수 있다. 첫째는 과거 가장 심각한 국내경제문제였던 物價가 울들어 안정기들이 다져지면서 물가오름세심리에 의한 국민생활습성과 정책운용방식이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國際原油價格이 계

속 오를 것이라는 과거의 대외적 고정관념이 原油價格引下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83년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가지 對內外與件이 결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企劃院은 지난 7월 15日 第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을 전면수정하여 11月中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12月15日 經濟計劃審議會에서 이를 확정된 다음 이를 84年 1月1日부터 실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修正計劃의 기본목표는 ① 안정성장의 기반강화 ② 저축과 수출의 증대 ③ 국제수지개선 ④ 技術革新 ⑤ 지역간 균형발전 ⑥ 개방과 자율경쟁질서의 구체화 ⑦ 계층간 기회균등보장 등이다. 이러한 기본목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①年平均 10%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原油價格이 오히려 引下되었고 ② 每年 15% 이상 상승하였던 物價水準이 1% 水準으로 안정됨에 따라 5次5個年計劃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5次5個年計劃은 第5共和國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다는데 정치적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과거 어떤 계획보다도 計劃作成過程에서부터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여 立案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5次5個年計劃을 1년반동안 실천하다가 갑자기 전면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計劃을 자주 수정한다면 計劃이라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며 그리고 計劃과 實績이 항상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번의 全面修正은 우리의 對內外經濟與件의 好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計劃修正이 合目的性을 지니게 되었으며 따라서 희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경제의 對內外與件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5次5個年計劃의 修正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의 運用方式 또한 크게 선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政策手段인 財政·金融政策이 근본적인 탈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日本經濟新聞은 지난 11月22日의 韓國經濟特集에서 한국경제의 景氣回復이 本軌道에 올라섰다고 강조하면서 금년의 GNP 成長率을 8~9%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경제의 高度成長은 과거 20여년간의 高度成長과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하는 物價의 安定속에서 이룩되었다는 데 注目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表-1>에서와 같이 금년의 GNP 成長率을 8.8%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都賣物價上昇率 0.3%, 그리고 消費者物價上昇率 3.5% 속에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20여년

간 평균 15% 이상의 消費者物價上昇率 속에서 이룩된 高度成長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금년에 轉換期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凍結豫算과 緊縮財政

더우기 政府財政面에서는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凍結豫算에 의한 黑字財政을 편성함으로써 전환기의 國民經濟에 보다 적극적인 政策意志로 대응하고 있다. 즉 제 4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의 GNP 成長率이 7.2%였는데 반하여 都賣物價上昇率은 19.6%, 租稅增加率은 그 보다도 더 높은 25.2%였으며 특히 一般會計의 政府財政增加率은 34%로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었다.

이와같이 우리가 과거에 높은 GNP 成長率을 달성하였던 것은 그 보다도 더 높은 物價上昇과 이것보다도 더 높은 租稅增加 및 歲出增加에 의하여 유도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4차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엄청난 財政規模의 확대와 赤字財政의 累增에 의한 工業化에 중점을 둔 不均衡의 成長論理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政府財政이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부터 國民經濟는 소위 政府主導型 經濟로 이끌리게 되었고 自律과 創意를 크게 발휘하지 못한채 오직 高度成長만이 지상의 과제로 부각됐었다.

그러나 高度成長이라는 국민경제의 밝은 측면과 아울러 經濟開發需要에 따른 資金需要를 國內金融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借款으로 메꾸으로써 엄청난 량의 外債가 累積되었다는 어두운 측면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 23年間 우리나라의 財政은 매년 30% 이상 그 규모가 팽창하여 왔으며 특히 財政赤字比率은 年平均 11.6%에 달하였는 데 이러한 赤字財政은 주로 韓國銀行借入, 國債發行, 그리고 外國借款으로 충당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赤字財政에 의한 經濟開發方式은 필연적으

<表-1> 韓國經濟展望

	82年	83年			84年
		上半期	下半期	年間	
GNP 成長率%	5.3	9.6	8.2	8.8	8.1
總消費	3.7	7.7	6.5	7.0	5.3
固定投資	11.6	17.2	11.5	14.1	9.2
商品輸出	2.5	7.4	17.0	12.4	11.8
商品輸入	2.2	11.9	7.5	9.5	8.2
經常收支(億弗)	▲26.5	▲13.2	▲8	▲21	▲15
貿易收支	▲25.9	▲11.8	▲6	▲18	▲12
輸出	208.8	103.1	123	226	263
輸入	234.7	115.0	129	244	275
物價上昇率(%)					
都賣物價	4.7	0.9	▲0.2	▲0.3	1.3
消費者物價	7.3	4.4	2.7	3.5	2.0
GNP 係數	7.7	3.4	3.6	3.5	2.2

資料: 日本經濟新聞, 1983年 11月 22日 第二部 4面

로 政府部門에서 通貨增發을 유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국민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켜왔다. 다시 말하면 高度成長속에는 항상 財政인플레이션이 수반되어 物價上昇을 유발함으로써 金融과 金利와 通貨가 自律的으로 實物經濟에 대응하지 못하고 開發財政에 의한 財政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에 바쁜 증속적인 정책수단으로 전략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2月 2日 成立된 84年度 豫算은 歲入規模가 정부원안대로 10조 9,667 억원, 歲出規模가 정부원안에서 오히려 304억 2,100 만원이 삭감된 10조 3,862 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우리재정사상 처음으로 두가지의 기록을 수립하였다. 즉 첫째는 歲出規模를 금년수준보다도 오히려 0.29%나 감축한 초 긴축예산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歲入을 歲出보다 늘려 잡은 처음의 黑字豫算이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豫算은 歲入과 歲出이 일치하는 均衡豫算이어야 하며 現代財政理論에서는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豫算은 赤字豫算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84年의 豫算을 黑字로 편성한 것은 종래의 開發財政이 가져온 인플레이션과 外債累積의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改革意志를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 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意志는 82年의 제로베이스예산편성, 83年의 예산증가율한자리숫자억제 그리고 84年의 豫算凍結, 85年의 總財政黑字化 등 일련의 財政計劃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外債負擔의 증가가 없는 國民經濟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 스스로 앞장서서 초긴축의 黑字豫算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80年代 우리의 목표인 福祉社會의 具現을 위하여서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財政需要와 이에 따른 資金需要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초긴축의 흑자예산이 어떠한 경제효과를 가져 올지 주시되어야 한다.

美國·日本은 물론이고 台灣에서도 초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Small Government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歲出만을 凍結하였을 뿐 歲入은 오히려 금년수준보다 9.6%나 증가하여 5,804 억원의 黑字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만큼 國民의 租稅負擔이 증가하여 擔稅率이 처음으로 GNP의 20%線을 넘어선 20.6%가 되었다.

이와같이 國民負擔을 전제로 한 변형의 초긴축흑자재정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外債없는 高度成長을 이룩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財政政策과 制度의 合理化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實例를 들어 설명하자면 첫째 歲入構造面에서 間接稅의 비중이 선진국과는 반대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租稅의 中立性이 상실되고 계층간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間接稅가 82년에는 60.8% 였는데 83년에는 63.4%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더우기 84년에는 64.3%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租稅體系와 租稅構造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歲出構造의 硬直性을 완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企劃計劃豫算制度(PPBS)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硬直性經費가 83년에는 전체 예산의 66.2%였던 것이 84년에는 67.8%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세째, 현행의 豫算制度가 單年度中心主義로 되어있기 때문에 國民經濟를 5個年計劃에 의

캠페인 ①

생각해 봅시다.

외제면 무엇이든 좋은 겁니까?

외제선호로 인해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좀 먹고 있는지 알고 제십니까?

혹시 부를 과시하고 싶거나 습관적 사치벽 때문에 무턱대고 외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더구나 부정외래품과 가짜외제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하여 운영하고 있는 政策基調와 財政政策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會計年度獨立의 원칙에 따라 新規所要經費를 長期財政需要展望을 고려하지 않고 漸增의 意思決定에 의하여 追加計上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計劃과 豫算을 연계시키기 위한 中長期豫算制度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政府主導下的 5 個年計劃(經濟 및 社會開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財政政策이 獨立的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항상 金融上的 政策을 수반하여 景氣政策(fiscal policy)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財政의 金融化 혹은 金融의 財政化의 次元에서 經濟政策을 財政金融의 統一과 調和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3. 金融의 自律化와 政策方向

一般的으로 金融政策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政府나 中央銀行이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金融制度나 金融機關에 대한 政府政策이며 둘째는 金融 그 자체에 관한 管理나 統制의 調整政策, 셋째는 産業 및 經濟政策을 위한 소위 政策金融의 실시이다. 이러한 세가지 내용의 金融政策은 궁극적으로는 通貨의 供給量을 변화시켜서 經濟政策의 目標을 달성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전술한 현대국가의 財政政策 역시 財政支出(經費)을 팽창 또는 축소시키든가 반대로 財政收入을 위하여 增稅, 아니면 減稅를 하든가 모두 궁극적으로는 通貨量의 變化매개를 통하여 그 政策目的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財政金融의 一體化에서 財政을 생각하고 金融을 생각하여야 한다.

<表-2>

主 要 通 貨 指 標

年度別 指 標	74	75	76	77	78	79	80	81	82
貨幣發行高	4,546 (28.6)	5,609 (23.4)	7,363 (31.3)	10,340 (40.4)	14,918 (44.3)	18,175 (21.8)	20,385 (12.2)	22,054 (8.2)	27,929 (26.6)
本源通貨(RB)	7,750 (24.2)	10,770 (39.0)	14,378 (33.5)	20,716 (44.1)	28,020 (35.3)	34,680 (23.8)	32,439 (△6.5)	28,016 (△136)	38,253 (36.5)
通貨(M ₁)	9,457 (29.5)	11,817 (25.0)	15,440 (30.7)	21,726 (40.7)	27,138 (24.9)	32,745 (20.7)	38,070 (16.3)	39,824 (4.6)	57,993 (45.6)
準通貨	15,108 (20.8)	19,682 (30.3)	26,607 (35.2)	37,018 (39.1)	52,149 (40.9)	66,033 (26.6)	87,275 (32.2)	116,887 (33.9)	141,049 (20.7)
總通貨(M ₂)	24,565 (24.0)	31,500 (28.2)	42,048 (33.5)	58,743 (39.7)	79,287 (35.0)	98,778 (24.6)	125,345 (26.9)	156,711 (25.0)	199,042 (27.0)
國內與信(DC)	30,056 (54.2)	39,733 (32.2)	48,368 (21.7)	59,786 (23.6)	87,219 (45.9)	118,263 (35.6)	167,776 (41.9)	220,157 (31.2)	275,290 (25.0)
貯蓄性預金(TD)	14,718 (20.5)	19,437 (32.1)	26,134 (34.5)	35,882 (37.3)	51,320 (43.0)	65,314 (27.3)	85,770 (31.3)	114,998 (34.1)	136,597 (18.6)
民間與信	28,846 (51.2)	35,598 (23.4)	44,676 (25.5)	56,141 (25.7)	82,579 (47.1)	114,914 (39.2)	160,465 (39.6)	202,734 (26.3)	253,706 (22.0)
預金銀行貸出金	24,278 (52.9)	29,055 (19.7)	37,249 (28.2)	47,090 (26.4)	66,090 (40.3)	89,778 (35.8)	122,044 (35.9)	159,549 (30.7)	202,257 (22.7)
總貸出金	28,535 (49.7)	34,833 (22.1)	44,648 (28.2)	57,169 (28.0)	80,524 (40.9)	111,158 (38.0)	153,096 (37.7)	203,069 (32.6)	248,958 (22.6)

註: () 內는 前年末比 增減率

資料: 財務部 理財局 金融政策課.

그런데 전술한 金融政策의 세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가지 矛盾的目標의 擇一에 의하여 그 政策的意義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즉 金融政策의 기본적인 목표는 金融의 円滑化와 通貨價値의 安定이다. 일반적으로 金融의 円滑化는 生産者인 企業의 利益에 奉仕하는 것이며 通貨價値의 安定은 消費者의 利益에 奉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目標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金融의 円滑化와 通貨價値의 安定을 잘 調和시켜 金融政策의 묘미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20여년간 우리는 經濟開發 5年計劃에 의하여 工業化를 서둘러 왔기 때문에 消費者인 國民의 生活安定보다는 企業의 生産活動을 자극하기 위한 金融政策을 실시해 왔으며 따라서 金融의 円滑化가 강조되어 항상 通貨膨脹에 의한 인플레이와 物價苦 속에서 국민이 지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80年代에는 通貨價値의 安定에 金融政策의 기본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 계속해서 貨幣發行高, 通貨(M_1) 總通貨(M_2) 그리고 總貸出 등 通貨指標가 <表-2>에서와 같이 모두 GNP 成長率의 3배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金融이나 通貨는 円滑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타성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따라서 IMF 등 國際機關의 권고

에 의하여 긴축정책을 다소 강행하기 시작하면 市中資金事情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여 財界는 물론이고 각계에서 반대하는 예가 자주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表-3>에서와 같이 總通貨의 GNP에 대한 比率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GNP의 高度成長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충분한 通貨供給이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견해도 있다. 물론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金融이 經濟安定보다는 經濟成長의 적극적인 動因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開發途上國이기 때문에 流動性 選好도와 貨幣의 流通速度를 충분히 고려한 通貨量의 適正水準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理論도 성립된다.

지난 11月 22日 개최된 5次 5年計劃修正을 위한 政策協議會에서 대부분의 各계인사들은 總通貨增加率을 12%로, 通貨增加率을 9%로 修正하려는 것은 지나친 긴축이며 金融仲介機能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通貨供給을 급격히 수축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자금경색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通貨政策을 伸縮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原油價格이 引下되고 國內物價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金融의 円滑化

通貨와 國民總生産

<表-3>

(單位: 億圓)

	78	79	80	81	82 ^{P)}
經常 GNP (A)	229,176	290,721	343,216	423,971	482,679
現金 年末發行高 (B)	14,918	18,175	20,385	22,054	27,929
通貨 年末現金通貨 (C)	13,644	16,040	18,564	20,254	25,737
預金通貨年末殘高 (D)	13,494	16,706	19,506	19,606	32,256
年末通貨 ($M_1 = C + D$)	27,138	32,745	38,070	39,860	57,993
年末總通貨 (M_2)	79,287	98,778	125,345	156,879	199,042
B / A (%)	6.5	6.3	5.9	5.2	5.8
C / A (%)	6.0	5.5	5.4	4.8	5.3
D / A (%)	5.9	5.7	5.7	4.6	6.7
M_1 / A (%)	11.8	11.3	11.1	9.4	12.0
M_2 / A (%)	34.6	34.0	36.5	37.0	41.2

資料: 財務部 理財局 金融政策課

를 주장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타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지나친 政策의 급선회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책의 급선회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이며 특히 金融政策은 어떤 흐름과 경제적인 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計量的으로 파악하려는 단순 논리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國民經濟의 對內外條件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 여기에 맞추어 政策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응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政策의 기준이 되는 理論과 現實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政府의 通貨 및 總通貨增加率에 관한 修正案의 타당성 여부를 그 기초가 되는 適正通貨理論과 그 現實的 條件의 분석으로부터 評價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通貨量水準은 GNP 成長率 + 物價上昇率로 정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20% 전후의 物價上昇率속에서 10% 전후의 GNP 成長率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通貨量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매년 30% 이상 通貨量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에 의한 高物價 속에서 GNP 成長이 이룩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5次5個年計劃期間中 GNP 成長目標을 7~8%, 物價上昇率을 2~3% 水準으로 기대한다면 通貨量의 증가율은 10% 전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的인 근거에서 政府가 總通貨增加率을 당초의 21%에서 12%, 水準으로 修正하려는 것은 일단 타

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物價安定속에서의 GNP 高成長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며 특히 財政史上 처음의 歲出凍結에 의한 赤字豫算이 앞으로 어떠한 經濟的效果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있는 해답을 할 수 없는데 金融政策의 不確實性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第2次石油波動에서 비롯된 世界的인 長期性不景氣이후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短期的인 景氣豫測마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理論이나 경험에 근거를 둔 財政 및 金融政策이라고 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韓國銀行發表에 의하면 11月末現在 總通貨增加率(去年同期對比)은 14.1%에 그쳐 10月中의 14.8%보다 0.7% 포인트가 낮아졌으며 通貨增加率도 10月中의 10.3%에서 8.8%로 떨어졌고 貨幣發行增加率도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와같은 安定勢가 지속된다면 금년도 總通貨增加率은 당초목표선인 15% 水準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82년의 總通貨增加率이 27%였던 것을 고려할 때 금년도의 總通貨增加率 15% 水準은 확실히 緊縮政策임에 틀림없다. 더우기 82年後半期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世界經濟의 영향을 받아 금년에 들어오면서부터 國內景氣도 점점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不況期의 資金需要와는 달리 施設投資資金과 生産資金의 需要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돼 通貨의 緊縮政策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인플레이와 外債 없는

캡 페 인 ②

생각해 봅시다.

애국심을 발휘해서 무조건 국산품을 사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져 봅시다.

국산품과 외래품이 품질면에선 어떻게 가격면에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부정의래품과 가짜외제의 범람이 우리의 국민경제·건강생활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만든 상품이 연간 2백 35억달러어치나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까닭에 대해서도.....

高度成長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모처럼만에 정착되고 있는 「제자리숫자물가」를 꼭 지킬 수 있는 金融 및 通貨政策이 강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金融 및 通貨政策이 財政史上 최초의 歲出凍結과 黑字豫算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財政政策과 調和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앞으로 정확한 景氣豫測을 통하여 景氣變動의 4局面에 財政 및 金融政策을 선택적으로 구사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는 兩者를 一體化시켜서 財政金融政策(monetary fiscal policy)을 組立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Stagflation 이 만연되는 인플레이下の 不況期局面이라면 財政金融의 總合政策化(policy mix)로 多目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多手段에 의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景氣變動의 순환이 빨라지는 추세에선 政策의 타이밍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을 설파시켜야 한다.

獨立의으로 財政과 金融의 政策을 실시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總合政策으로서의 景氣政策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金融政策은 財政政策보다 間接的이며 彈力的인 政策手段이라 景氣變動의 各局面이 시작될 때는 金融政策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 財政政策은 直接的이며 機動的인 政策手段이라고는 하지만 國會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政策의立案에서부터 實施할 때까지 時差(time lag)가 커 기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도 財政金融의 總合政策化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에 金融의 自律化 및 金利의 自律化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長期的인 政策目標로서 타당하며 특히 이제껏 金融이 財政의 종속적수단으로 전락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金融産業의 발전과 民間主導型經濟의 창달을 위하여서도 金融의 自律化가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현재 金融이 實物經濟의 발전에 뒤따

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金利變動이 資金의 需給調節機能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形式的인 金融 및 金利의 自律化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단계로서는 金融 및 金利의 自律化를 기할 수 있는 與件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위하여서는 金融 및 金利 그리고 通貨에 관한 강력한 制度나 法律을 만들기 앞서 金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 즉 物價安定을 통한 經濟安定을 기함으로써 實質金利와 實質利潤이 보장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24%에 지나지 않는 國內貯蓄率을 86년까지 30.1%로 높임으로써 投資財源을 外資가 아닌 內資로 충당하겠다는 극히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金融政策도 국민의 경제적 여유나 高金利보다도 物價安定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融의 自律化를 위하여서도 먼저 物價 및 經濟安定이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결국 金融政策이 通貨價値의 安定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韓國銀行의 銀行監督機能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현재의 中央銀行法이나 政府의 銀行監督制度만으로도 金融을 충분히 管理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의 金融危機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制度나 보다 강력한 法律의 制定은 그 必要性이 없다고 생각된다.

日本의 경우 현재 세계 제2의 經濟大國이면서도 40年前 戰時下에서 制定된 日本銀行法으로 전혀 여건이 다르고 방대한 오늘의 日本金融을 運用의 묘로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金融通貨運營委員會와 同一한 性格을 지닌 日本金融政策의 최고결정기구인 「金融政策委員會」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財務部長官이 議長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日本은 委員(7名)의 互選에 의하여 議長을 결정하며 보통 日本銀行總裁가 議長을 맡는다. 이들은 金融 및 通貨政策決定에 있어 財政當局과 金融當局이 對立하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한 責任과 自律을 바탕으로 한 統一的인 意思決定으로 無理없는 金融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